

●● 제3회 정책경연의 장(2021년 4분기)

●● 정책기획조정회의, 심의표 취합 (2021.12.23.~12.29.)

1. 정책제안서 심사 기준

- 심사기준(4가지)을 고려하여 정성평가 후 위원 간 합의를 통해 결정
 - 의제 중요성, 의제 파급력, 정책대안 타당성, 정책대안 실현가능성
 - 정책기획조정회의 구성원 18명(각 위원장 및 연구원장) 중 과반수 이상 심사 참여
 - 단, 제출된 정책제안서가 본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 제안서의 경우 심사하지 않음

○ 평가지표(괄호 숫자는 비중)

: 정책제안서 항목을 보고 각 평가지표에 대해 심사

구분	평가 지표	평가사항	정책제안서 항목
정책 의제 (60)	의제의 중요성 (30)	*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 명확한 문제의식을 갖고 현황분석을 잘 하고 있을 경우 높은 점수 - 문제의식이 명확한가? - 시의성 있는 의제인가? - 문제현황을 잘 분석하고 있는가?	배경
	의제의 파급력 (30)	*기존의 정책과정에서 다루지 않았던 의제/정책대상을 다루고 있을 경우 높은 점수 - 정책내용 측면에서 참신한 의제인가? - 정책대상집단 측면에서 참신한가?	배경 기대효과
정책 대안 (40)	정책대안의 타당성 (30)	*정책 개선방향 구체적으로 제시하고, 적절한 정책수단 제시했을 경우 높은 점수 - 개선해야 할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가? -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을 적절하게 제시하였는가?	주요 정책내용 기대효과
	정책대안의 실현가능성 (10)	*대안의 실현가능성이 높으면 높은 점수 -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의 실현가능성이 있는가?	개선방안

2. 심의 결과 (심의표 취합)

No.	위원회	정책명	평가 (○/△/×)
1	4차산업혁명위원회	의경버스(공무수행용 버스)의 전기차량 전환	
	<p>코멘트 :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 - 차량 전량이 아니라 시위통제/치안 목적 차량 일부만이라도 전환한다면 좋을 것임 - 비상시 작전 수행에 무리가 없다는 전제 하에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함 - 배터리는 충전식 보다는 교체형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봄 - ▲의제 중요성(문제의식/시의성) 측면에서 우수 ▲의제 파급력 측면에서도 ‘생활형’ 정책 참신성이 돋보임 ▲문제현황 분석/정책내용 제시/기대효과 부분들에서 ‘계량화된 수치 data’ 를 추가하면 좋겠음 ▲실현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범(법령 및 시행규칙 등)의 현황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가운데, 규범 개정이 어떤 내용으로 바뀌는 것이 필요한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 		
2	4차산업혁명위원회	배달용 오토바이의 전기 오토바이로의 전환 지원	
	<p>코멘트 :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존에 지원하는 정책 대비 효과성 검증 필요함 - 범위나 실행 측면에서 어려움 예상됨 - 기존 전기 오토바이 전환 지원 정책을 추가 확대하는 것이 더 좋을 듯함.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될까 우려됨 - 배터리는 충전식 보다는 교체형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봄 - ※위 정책과 동일인이 제안한 정책이기에 내용 유사성이 있음. 다만 정책의 대상물과 대상집단이 다르기에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맞음. ▲의제 중요성(문제의식/시의성) 측면에서 우수 ▲의제 파급력 측면에서도 ‘생활형’ 정책 참신성이 돋보임 ▲현황/정책내용/기대효과 부분들에서 ‘계량화된 수치 data’ 를 추가하면 좋겠음 ▲실현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범(법령 및 시행규칙 등)의 현황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가운데, 규범 개정이 어떤 내용으로 바뀌는 것이 필요한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 		
3	경기도당	경기도 미래농업혁신지구 조성	
	<p>코멘트 :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도농복합도시를 위한 혁신지구 개발 필요함 		

	<p>- 4차산업혁명 시대의 신농업과 식량안보 및 식량주권, K-FOOD 확산, 도농 균형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됨</p> <p>- 취지는 좋으나 경기도보다는 다른 시도에서 적용되었으면 함(인구소멸 등)</p> <p>- ▲의제 중요성(문제의식/시의성) 측면에서 우수(특히 3농(농업/농촌/농민)관점의 시급성면에서)</p> <p>▲의제 파급력면에서는 이 문제가 경기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국단위의 오래된 문제라는 점에서 참신하다고 볼 수는 없음. 그러나 해묵은 문제라고 해서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이 아니듯 비록 농업이 한국경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전환 시대 6차산업으로써의 발전가능성을 유념해 추진해야 할 중요 분야임에 틀림 없음</p> <p>▲ ‘네덜란드 바헤닝언’ 사례는 이미 많이 알려진 경우인데, 사례를 찾아보는 이유는 그 사례가 한국적 농업토양에 어느 정도 적용가능성이 있는지, 한국농업이 외국성공사례를 소화해 낼 수 있는 기초여건이 되어 있는지, 안 되어 있다면 향후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지, 그 가능성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의 보완정책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상세하고 비판적인 관점의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.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보완이 필요함. 제안자가 언급한(주요 정책내용 부분에서) 여주, 양평, 가평, 포천, 연천 등 경기 동북부 일대에 ‘왜 하필 이 지역에 농업혁신지구가 조성되어야 하는지, 즉 이 지역이 농업혁신지구로써 발전가능성과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 같은데,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규명할 수 있어야 함.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역 지자체에 대한 농정현황분석, 농업경제현황분석 등이 자세히 이뤄져야 함.</p> <p>▲정책대안(40)(대안의 타당성(30)/실현가능성(10)) 부분에 대한 추가 상세분석이 요구됨</p>		
4	<table border="1" data-bbox="239 1176 1465 1332"> <tr> <td data-bbox="239 1176 550 1332">교육위원회</td> <td data-bbox="550 1176 1465 1332">지방교육재정교부금 ‘특별교부금의 보고’ 조항 신설</td> </tr> </table> <p>코멘트 :</p> <p>- 예산 전용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임</p> <p>- 각종 단체장의 쌈짓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교육 뿐 아니라 다른 기관들로 확대되면 좋겠음</p> <p>- 적극 찬성, 문제는 지역구 관리예산처럼 쓰일 가능성이 농후함</p> <p>- 시장원리를 거스르는 제안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 짐.</p> <p>- ▲의제 중요성(문제의식/시의성/현황분석) 측면에서 ‘문제의식’ 과 ‘현황분석’ 을 잘 했다고 판단됨</p> <p>▲의제 파급력(정책 내용 및 대상집단의 참신성) 측면에서는 일반적으로 세간의 관심과 주목을 끌기 쉽지 않은 분야가 ‘정부 공공재정’ 분야인데, 중앙행정부처 별로 상이한 교부금 운용에 대해 구체적인 비교분석을 시도해 문제점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돋보임</p> <p>▲정책대안(40)(대안의 타당성(30)/실현가능성(10)) 측면에서 볼 때, 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운용 정책의 그간의 행태가 국회에 대한 보고 없이 진행될 수 있었던지에 대한 배경 및 원인, 교부금을 둘러싼 이익집단들의 이해관계 분석 등이 된 이후에라야 비로소 이 문제를 국회보고 사항으로 운영프로세스를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에 대한</p>	교육위원회	지방교육재정교부금 ‘특별교부금의 보고’ 조항 신설
교육위원회	지방교육재정교부금 ‘특별교부금의 보고’ 조항 신설		

<p>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임. 이에 (조정훈 의원실 지원 하에)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을 편성, 운영하는 소관조직에 대한 세밀조사 등을 통해 그간의 관습적 행태에 대한 원인 분석을 선행할 것을 권고함.</p>		
<p>새로운규칙위원회</p>	<p>가상자산 허브특구 육성</p>	
<p>5</p>	<p>코멘트 :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가상자산에 대한 국가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봄 - 산업화시대, 민주화시대의 뒤를 이어 시대전환이 만들어 가야 할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정책이라고 생각됨. 다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‘시범특구’ 형태로 테스트베드를 운영해 본 후 확대하는 것이 좋아 보임. - ▲의제 중요성(문제의식/시의성/현황분석) 측면에서 ‘문제의식’, ‘시의성’, ‘현황분석’ 을 잘 했다고 판단됨. 특히 ‘시의성’ 측면에서 우수 ▲의제 파급력(정책 내용 및 대상집단의 참신성) 측면에서도 디지털 전환 시대 대한민국의 신 성장동력 산업분야로 가능성이 높았으나 정부규제의 불합리와 관료제의 혁신마인드 부족에 따른 지나친 신중함으로 인해 ‘유치산업’ 으로 초기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데 실패했기에 지금이라도 fast following을 통해 스위스, 싱가포르, 홍콩 등 블록체인 기반 가상화폐 시장 발전상을 벤치마킹하여 신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큼 ▲다만 정책대안(40)(대안의 타당성(30)/실현가능성(10)) 측면에서 볼 때,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정부규제기관(과기부, 금융위, 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지자체)의 소관부처 별 단위로 쪼개어져 규제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면밀한 원인파악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. 규제기관이 그렇게 규제하는 이유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임. 그 이유의 원인에 대해 대안제시를 할 수 있어야 관료집단의 정책수용성이 높아지면서 정책의 창이 열릴 수 있음. 2) 한국보다 앞서 있는 블록체인 및 가상화폐 시장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해외사례에 대한 조사가 더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. 3) 지역별 특구화 정책을 통해 ‘재량권’ 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지자체의 경우, 이 분야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관료집단의 역량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함.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의 전환 시 이를 운용해 갈 수 있을 정도의 중앙 및 지방정부의 조직적(organizational competency), 공무원 개별역량적(individual competency) 측면에서의 운용역량 확보를 전제로 하는 것임. 	